



# “소외된 연구계층 지원 늘려야”

글\_홍진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jinthong@chungbuk.ac.kr

**최** 근 주요 매스컴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및 경제발전 침체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을 위시한 여러 기관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공계 진학 학생들을 위한 각종 장학제도 확충, 병역특례제도 도입, 해외연수 지원, 신규 연구인력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기획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공계 국가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를 통해 2004학년도 이공계대학 수리과학탐구 영역 우수 신입생 5천30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256억 원 상당의 ‘이공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 경제산업 발전의 근간인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도록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이공계분야에 대한 인식전환 절실

그러나, 다양한 국가 정책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직접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비롯한 과학기술분야의 침체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미래 문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다.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인연합에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의견과 비전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 설문 조사’에서 현사회의 이공계 위기가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미래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응답이 81%에 달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처우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기초 생활비 보장, 안정적 신분보

장 및 진로 확충 등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처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가져올 대대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현실론에 안주하여 자녀들을 의약계열에 진학시키려는 사회인식은 둘째치고라도 미래의 다양성을 걱정하여야 하는 우리 청소년에게도 이공계의 기피현상은 뚜렷한 듯하다.

얼마 전, 이공계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인터넷에 “요즘 신문과 TV를 장식하는 이공계 기피며, 과학기술자 신분 불안 등의 뉴스를 듣는 우리 고3 학생들의 마음은 우울하기만 하다”는 글을 올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학과 수학에 재능을 보이는 과학고 학생 중 30% 이상이 장래 희망을 의사로 대답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현정부 7차 교육과정에는 물리 및 화학이 의무교과목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형편에서 과학강국은 고사하고 대만 등과 같은 유사국가와의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청소년에게 ‘과학’을 활기찬 자신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과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약분야에서도 보다 먼 장래와 후세대를 위한 연구중심의 진로에도 비전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공계를 졸업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생활의 안정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이미 과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기존의 연구인력들에게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이공계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연구인력 및 병역특례요원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인력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지위확보와 더불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연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된다면, 이를 지켜 보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공계 분야로의 진학을 꿈꿀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우려와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심으로 연구에 몰두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연구인력에 더 많은 연구기회를

최근의 다양하고 파격적인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연구 현장에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및 연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경기 이남의 지방소재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느끼는 연구인력난과 연구재정부족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소재 대학에서는 우

수한 연구인력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우수한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역별 분포 (과학기술부, 2002년 기준)에서도 연구소 밀집 지역인 대전지역(30.3%)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5% 미만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26.5, 17.9%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대학과 연구소가 치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방소재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신념을 가지고 연구에 정진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과 자괴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연구과제가 특정 대학,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은 지역연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소외된 그룹에서 자생력있는 새로운 연구역량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구성원들은 새로운 전기로 생각하여 지역에서 국가로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에도 국가는 나서야 한다. 연구능력의 진단없이 신진연구인력에 무조건적인 지원은 안되지만, 일정 기간 정부가 박사 후 과정이나 신진연구인력에게 ‘신진연구인력 기반구축 연구비’ 등을 마련하는 등 이들 젊은 신진인재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기 바란다. 최근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지원방안과 시간강사를 비롯한 고학력 인재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임시방편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신진연구인력이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연구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상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연구비 확보를 위한 연구’를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현실은 신진연구인력들이 마음껏 그 재능과 포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기술인의 푸대접론으로 인식되고, 실적 부풀리기, 현장과 무관한 연구, 질보다 양에 치우치는 연구풍토, 온정주의에 빠지는 과학기술계의 거품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



글쓴이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 대학교에서 독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을 지냈다.